

“광주형 돌봄 기대감... 인력·인프라 강화해야”

임미현 광산구 상생복지국장 “복지 수요 선파악으로 정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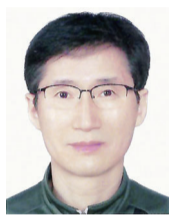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각 구청은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먼저 기존 돌봄사례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청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 사업 대상자 중 고년도의 사례관리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각 동에서 의무방문할 예정이다. 본격 시행된 후에 신청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위

험이 있어서 3월부터 미리 정책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했고 선정심의 절차를 거친 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광산구는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팀도 신설했다.

결국 인력의 문제다. 대상자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병행동행 또는 가사지원을 고민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사례를 토대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동에 인력이 보완이 안돼 일이 풀린다면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박종민 늘행복마을건강센터장 “인프라 늘려 방문진료 질 높여야”



4월1일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주거 등 세가지 기둥이 바로 서야 한다. 민간·복지분야의 핵심은 의료지원이다. 광주 광산구와 서구는 직접 의사를 채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광주+돌봄 7대 서비스(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의 하나인 광주시민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한다.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주치의적 성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민간의료시장은 ‘병원 진료’ 구조로 돼 있다. ‘방문진료가 돈이 안된다’는 시장 논리 탓이다. 통합돌봄의 방문진료가 성공을 거둔다면 의료시장도 변화할 것이다. 다만 서구의 재택의료센터, 광산구의 우리동네의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문진료의 성공여부는 결국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동네의원 같은 인프라가 더 많이 생겨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수미 늘행복마을건강센터 매니저 “현장과 정책간 수가 괴리 좁혀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대상자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선 동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 담당자가 돌봄 대상자의 요구대로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필요한 과제와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지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 현재 돌봄대상자들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가 너무 어렵다. 인정이 절실한 대상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많이 포기한다. 통합돌봄 7

대 서비스에 긴급돌봄이 있어 단기적으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절차 완화 등 행정·제도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통합돌봄의 방문진료 수가가 실제 수가보다 낮게 설정됐다. 현장 수가는 15만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에선 12만원이고, 현장 방문재활 수가는 1시간에 7~10만원대인데 통합돌봄은 1시간에 5만원이다. 실제 수가와 많은 차이가 있어 제공기관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정책이 시행되면 단계적으로 괴리감을 좁혀야 될 것 같다.

오윤옥 광주사회서비스원 지원팀장 “사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시급”



(재)광주사회서비스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긴급돌봄’에 최적화 돼 있다. 이미 지난 2020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업 일환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1호 사업이기도 하다. 통합돌봄의 긴급돌봄은 일상에서의 긴급 위기상황과 민간(복지기관)에서 돌봄이 힘든 사례(이용자 폭력성·복합질환자 등) 등 기존 또는 광주+돌봄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사지원을 도맡아 하는 일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사회서비스원이 2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닥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에서 관련 부서가 신설, 운영 중이다. 이중 통합돌봄 운영에 핵심인 사례관리 담당공무원(공무원+간호직 지정)이 총 97개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이들은 접수된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는 일을 한다. 사례관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미정 서구 종합재가센터장 “돌봄관리사 인력충원 검토 필요”



서구 종합재가센터는 광주에 3곳(북구·광산구 포함) 중 한 곳이다. 서구에는 종합재가센터 외에도 서구 지역자활센터,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등도 운영 중이다. 서구 종합재가센터는 서구와 남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을 해왔고 7대 돌봄서비스 중 가사·동행지원을 하고 있다. 종합재가센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종합재가센터

에는 15명의 돌봄관리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가 소화하기 힘든 30분 단기 돌봄, 근로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제외한 시간에 돌봄을 한다. 통합돌봄이 기존 인력구조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서구 종합재가센터의 남구 등 관할 확대, 서비스 대상의 증가에 따른 돌봄관리사의 인력충원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 자구적으로 근무시간 조정 등 전일제 근로자 기준 근무시간을 월 160시간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다움

←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이 최근 광주의 한 방문진료 대상자를 찾아 진료를 하고 있다. 우리동네의원 제공

→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 입구에 방문진료신청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우리동네의원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 어르신, 거동 불편 질환자 등이 방문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방문진료를 받으십시오.

방문진료 시간: 화·목·금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방문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상담하십시오.

062-452-7020 우리동네의원 Woon Dongne Clinic

방문진료 마견호기자

돌봄공백 해소 노력 불구 ‘지원체계’ 한계

방문진료 1회 12만원, 연간 지원금 부족 인력 부족 탓 영유아 돌봄대기만 ‘수개월’

4월1일 시행을 앞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연 102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 소득층이 충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엔 한계가 있고 기존 돌봄체계의 개선도 선결돼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소득층은 중위소득 85% 이하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중위소득 85%이하 층에 광주+돌봄 지원금액을 연간 150만원, 긴급돌봄 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연간 60만원이 지원된다. 경제 취약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고물가의 영향을 받는 각종 서비스비용이 턱없이 높아 지원대상자들의 아쉬움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혜택을 체감도 하기전에 지원금액이 소실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연 150만원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광주+돌봄의 7대 서비스다. 7대 서비스 이용금액은 시급 1만6600원이 기본이다. 1년에 90시간, 월 평균 7.5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가사지원과 건강지원 중 일부 서비스 비용은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지원과 주거편의 원 서비스 비용은 고비용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있는 방문진료 서비스인 ‘우리동네의원’의 이용비용은 1회 12만원, 방문맞춤운송 비용은 1회 5만원이다. 안전

지원 서비스 비용은 연1회에 한해 100만원이다. 주거편의 비용 역시 간단 수리는 1회 10만원이지만 대정소는 1회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망 위에 구축되는 서비스 인 만큼 기존 돌봄망의 구조적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돌봄대기 시간이다. 이용자에게 기존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4일 정도다. 광주시는 이 기간을 ‘긴급돌봄’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지만, 3~4일의 시간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대기시간까지 고려하면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아 아이돌봄이 대표적인 예다. 아이돌보미의 정기교육과 모니터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돌봄인력을 배치받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주관업체에서도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규정에 따라 자치구별 공급인력 채용은 연1회 10명미만에 그치는 상황이다. 긴급돌봄 지원금 60만원으로는 50시간 남짓만 이용할 수 있다. 하루 4시간 가량의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경우 보름정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금보다는 기존 돌봄망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석달을 기다려 아이돌보미를 겨우 배정받았다”며 “강하게 항의했더니 여성가족부 규정이란 주관업체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긴급돌봄 비용만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만 가져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지기자